

#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 성과와 발전 방안\*

## Performance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Support System of Good Price Stores

유보람\*\* (Boram Yoo) 이서희\*\*\* (Seohee Lee)

### 요약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는 주변 상권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11년 최초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인지도가 낮고 체계적인 법·재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필요성의 증가에 따라 재정지원이 확대되었지만, 지속적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

제도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타당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의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량적·정성적 측면에서 성과를 분석하여 세 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첫째, 착한가격지정업소는 지방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둘째, 착한가격지정업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정성적 측면에서 착한가격업소 체감 효과를 검토한 결과 가게 이미지 개선, 홍보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착한가격업소, 물가안정화 정책, 소상공인 지원

\* 본 연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4년 정책과제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를 요약·보완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부연구위원(주저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부연구위원(공동저자)

## I. 서론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경제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관계부처합동, 2024). 특히, 물가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물가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세제지원, 착한가격업소 확대, 농축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동결, 서민생활 밀접 품목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중,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는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사업체 지원을 통해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물가안정 정책 대부분은 물가안정을 위한 규제적 수단이나 강제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사실상 국가 중심의 획일적 정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물가 안정화는 더 이상 강제적 규제와 통제 조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는 정부 간, 민·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물가안정이라는 행정목표 달성을 위한 유도적 수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2011년 착한가격업소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법·재정적 측면의 제도적 지원이나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제도 활성화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제도의 실질적 운영 기간이 10년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제도 지원에 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의 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긍정적 성과가 확산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도 성과 분석은 두 개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착한가격업소 시행이 사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하였는가 둘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지역물가 안정화에 기여하였는가이다. 분석을 위한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 개요 및 현황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실제 착한가격지정업소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감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 성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II.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에 관한 논의

### 1)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 개요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는 개인 서비스업 요금의 가격안정 유도를 통한 지역 물가 안정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운영된 제도이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수급조절 및 유통관리 제도,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수급조절 및 관리 제도 등 중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지역물가 안정화 정책이 수행중에 있다. 물가 안정화와 관련된 정책 중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는 특정 품목에 대한 물가 관리 정책이 아닌 지방 물가안정 전반에 관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며, 지역 전체의 물가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조례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운영 지원한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의 목적을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도모를 포함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는 운영 주체, 운영 주체별 역할이 상이하고, 지원 내용 역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다. 다만,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은 중앙부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의 주체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통해 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관리를 비롯하여 종량제 봉투 제공 등 직·간접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착한가격업소는 법률에 근거한 지원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지원·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조례를 통해 결정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서민 이용률이 높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착한가격업소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가격이다. 즉, 동일 메뉴에 대해 인근 상권 평균 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가격동결 유지 기간 등에 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한 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격 변동을 통해 평균 가격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표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분야	업종구분	지정기준		배점 (점)
가격	공통	총점		55
		가격수준	•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20
		가격안정 노력	•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	10
위생 · 청결	요식업	주방 등	•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조리도구 등 청결도	10
		매장 내	•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7
		화장실	•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3
	비요식업	주영업시설	•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15
		화장실	•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5
공공성	공통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여부, 표찰 부착,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사회 공헌도		4
	요식업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1
	비요식업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폐가를 활용한 숙박업 등)		1

자료: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내용 재구성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고 난 이후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지원 내용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7개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정표찰, 물품지원, 공공요금 지원, 안전점검 지원, 자금 우선 추천 의뢰, 경영환경 개선 지원 및 홍보가 있다. 먼저 지정 표찰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물(표지판, 표찰 등)을 제작하여 설치·교부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두 번째로 물품지원은 위생방역 용품 등 소모품이나 각종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공공요금 지원은 종량제 봉투지원과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안전 점검 보조는 전기 및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보조하는 것이고, 자금지원 우선 추천의뢰는 경영 안정 자금이나 특례 보증 등의 실시에 있어 우선 추천 의뢰를 하는 것이다. 경영환경 개선은 소규모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등의 지원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홍보 지원은 홍보용품,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SNS, 소식지 등의 지원을 포함한다.

## 2)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2023년 12월 기준 착한가격업소는 총 7,172개소로 연도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 착한가격업소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 6-9월, 9-12월 증가율은 연간(2020-21년) 증가율보다 높아 20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증가 속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착한가격업소의 증가는 중앙의 재정지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최초로 국비 15억원이 각 지방자치

단체로 지원되었고, 2024년 18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업소당 평균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즉,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았던 2022년 A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체당 지원 금액은 약 2만원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으나(경인일보, 2022.08.12.), 2023년 국비 지원을 통해 평균 지원액이 2022년 45만원에서 20'23년 85만원으로 증액되어 착한가격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

<표 2> 연도별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단위: 개)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지정업소	5,799	5,895	6,146	7,172
증감율	-	1.66	4.26	16.69
구분	'22년	'23년6월	'23년 9월	'23년 12월
지정업소	6,146	6,633	6,860	7,172
증감율	-	7.92	3.42	4.55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내부 자료

시·도별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검토하면 서울, 부산, 경기 순으로 지정업소의 수가 많으며, 2023년 9월 대비 12월에 13개 시도에서 착한가격업소 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증가한 13개 시도 중 서울이 최고 121개소 증가, 부산이 최저 2개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일 또는 감소 추이를 나타내는 4개 시도 중, 세종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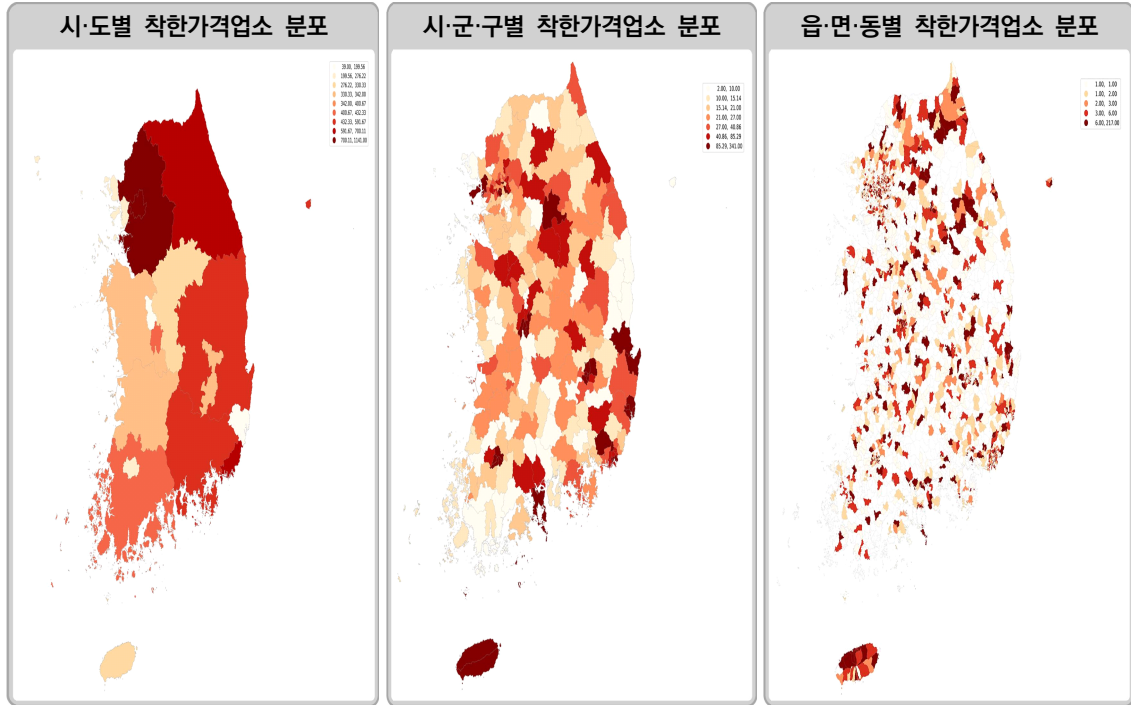
<표 3> 지역·연도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합계	증가(13)													동일 또는 감소(4)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인천	충북	세종	경남
'23. 12	7,172	1,076	647	339	226	402	121	828	595	334	331	405	578	301	218	317	36	418
'23. 9	6,860	955	645	321	220	374	115	792	588	310	324	403	564	256	218	317	39	419
증감	312	121	2	18	6	28	6	36	7	24	7	2	14	45	0	0	-3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시·도 광역 단위보다, 시·군·구 기초 단위, 나아가 읍·면·동 지역 단위에서 착한가격업소 분포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착한가격업소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분석 단위의 설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전국적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절대적 수가 적기 때문에 시도 광역 단위보다, 시·군·구 기초 단위, 나아가 읍·면·동 지역 단위에서 착한가격업소 분포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분석 단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지역단위별 착한가격업소 분포



주: 색 진할수록 분포도 높음

마지막으로 2023년 12월 기준 착한가격업소 취소 건수를 살펴보면 총 171건으로 이 중 휴·폐업 비중이 가장 높고(50%), 가격 인상 등에 따른 변동(22%), 자진 취소(9%), 기타 자격기준 미달(18%)의 비중도 높은 편으로 확인된다. 착한가격 지정업소 평가 기준 중 가격은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인데 가격 변경을 감행한 것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진취소 비율이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검토하여 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3) 착한가격업소 관련 선행연구 분석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제도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발표된 착한가격업소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착한가격업소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와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로 구분된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방문 요인 분석 등 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정이나 인증업소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강조하면서 착한가격업소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조원희 외(2021)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활성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제도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확대는 표준시책 마련과 같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인증 확대가 주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현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책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조용현 외(2018)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분석하여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는 소비자는 가격대비 양적추구형, 가격대비 맛추구형, 청결추구형, 위치확인형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방문은 저렴한 가격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음식의 질을 포함한 가게의 청결함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방문을 결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산을 위해 저렴한 가격만을 강조하는 홍보 방식이 아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정업소의 환경 개선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배순영(2012)은 2011년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 도입 직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서 강조하는 정책 제안은 주로 업소의 선정 기준 및 평가 방식에 관한 것으로 가격 외에 지정업소의 서비스 수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선정 이후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 III.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 성과에 관한 정량분석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 성과 분석은 사업체 측면과 지역물가안정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사업체 측면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사업체는 미지정 사업체와 비교하여 차별적 성과가 발견되는지 분석하였고, 분석을 위하여 지정사업체와 미지정사업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비교·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지역물가안정화 측면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주요 품목별 외식물가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 1) 연구설계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 성과 분석을 위하여 두 개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고, 분석 틀은 다음과 같다.

<표 4> 착한가격업소 정책효과 분석틀

구분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목적	지역별 착한가격업소 시행에 따른 효과	지역물가 안정화 효과
결과 변수	매출액 영업이익	일반 외식물가 대비 착한가격 업소 물가수준 연도 추정
추정 단위	7개 권역(읍·면·동)	17개 시도
분석 방법	상이비교집단 시계열 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 DID)	지방물가수준 연도별 비교

먼저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지역별 착한가격업소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와 미지정업소 행정구역(읍·면·동)을 구분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23년 12월 기준 착한가격업소 총 7,172개소이고, 분석 단위는 읍·면·동이다. 분석 단위를 읍·면·동으로 설정한 이유는 착한가격 지정업소의 절대적 수가 많지 않아 시·군·구를 기준으로 지정업소 여부를 구분하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읍·면·동으로 구분할 때 지정 여부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다.

분석방법은 상이비교집단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이비교집단 시계열 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 이중차중법, DID)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제도 자체의 순수한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DID 분석법은 사회과학에서 사업 시행 전후, 집단 간 사업 시행 여부에 따른 효과 분석 등을 위해 강력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황관석·박철성, 2015; 박대근·김홍순, 2020 등). 분석자료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데이터와 통계청 경제총조사 읍면동별 산업대분류별 총괄 데이터로 2015년, 2020년 숙박 및 음식점에 해당하는 읍면동 단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자료이다.

다음으로 착한가격업소 시행에 따른 지역물가 안정화 기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별·품목별 물가 수준을 비교하였다. 분석 대상은 외식업 관련 주요 품목으로 외식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현재 착한가격 지정업소의 업종별 비중 검토 결과 외식업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기준 총 7,172개 업체 중 74.6%에 해당하는 5,347개가 외식업 업종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정보공개(<https://www.mois.go.kr>)를 통해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30개 주요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여 매월 초 시도별·품목별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8개의



주요 품목을 선정하여 연도별·지역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즉, 2023년 12월 기준,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와 미지정업소를 구분하여 현재 물가수준에서 착한가격업소 평균 가격이 과거 몇 년도 물가수준인가를 검토하였다.

외식 물가수준의 비교·분석을 위한 분석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며, 분석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23년도 12월을 기준으로, 외식비 조사 품목을 중심으로(①냉면, ②비빔밥, ③김치찌개, ④삼겹살, ⑤자장면, ⑥삼계탕, ⑦칼국수, ⑧김밥) 착한가격업소 가격평균과 미지정업소 가격평균을 산출하였다. 둘째,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일반 외식물가 대비 착한가격업소 물가수준 연도를 산출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가격은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로, 일반 외식물가는 지방물가정보공개(<https://www.mois.go.kr>) 포털을 활용하였다.

## 2) 분석결과

지역별 착한가격업소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행정구역은 미지정 행정구역과 비교하여 2015년 대비 2020년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 10.13%p, 10.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수도권이 가장 큰 폭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였고, 강원권과 호남권이 가장 작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착한가격업소 지정 여부에 따른 행정구역 경제성 변화율 비교(15-20년)

지역	변수	업종	구분	기간	지정업소 변화량	미지정업소 변화량	차이
전국	매출액	전체	평균	2015-2020	58.27	48.14	10.13
전국	영업이익	전체	평균	2015-2020	-30.33	-40.36	10.03
수도권	매출액	전체	평균	2015-2020	101.34	47.00	54.34
수도권	영업이익	전체	평균	2015-2020	-16.80	-67.91	51.11
비수도권	매출액	전체	평균	2015-2020	37.91	48.64	-10.73
비수도권	영업이익	전체	평균	2015-2020	-36.73	-28.01	-8.72
강원권	매출액	전체	평균	2015-2020	58.18	48.48	9.69
강원권	영업이익	전체	평균	2015-2020	-29.23	-40.65	11.43
충청권	매출액	전체	평균	2015-2020	63.21	46.70	16.51
충청권	영업이익	전체	평균	2015-2020	-29.71	-42.87	13.16
대경권	매출액	전체	평균	2015-2020	62.04	46.90	15.14
대경권	영업이익	전체	평균	2015-2020	-29.09	-41.85	12.76
동남권	매출액	전체	평균	2015-2020	67.04	49.99	17.05
동남권	영업이익	전체	평균	2015-2020	-27.08	-40.37	13.29

호남권	매출액	전체	평균	2015-2020	57.92	48.20	9.72
호남권	영업이익	전체	평균	2015-2020	-31.20	-46.36	15.17
제주권	매출액	전체	평균	2015-2020	58.27	48.16	10.11
제주권	영업이익	전체	평균	2015-2020	-30.33	-40.27	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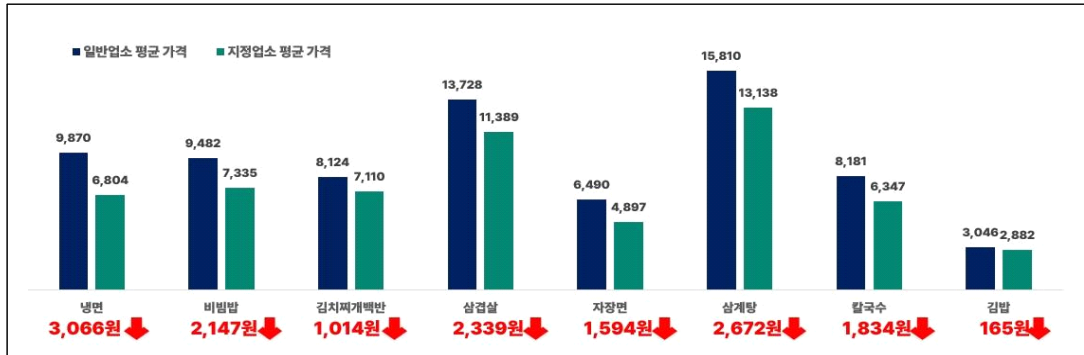
다음으로 지역물가 안정화 기여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최대 12년 전 수준까지도 유지되는 품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주요 품목별 평균적인 가격 인상 변화율을 살펴보았다. 22년도 대비 23년도 8개 품목 외식비 가격인상 변화율을 지역별로 구분한 결과, 대전(8.48%), 울산(5.78%), 서울(5.69%) 순으로 평균 외식비 가격이 인상되었고, 품목별로 구분한 결과, 냉면(6.83%), 비빔밥(6.55%), 김밥(5.44%) 등이 전년도 대비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지역물가 안정화 기여 효과를 검토한 결과 23년도 12월 기준, 전체 지역물가와 착한가격업소의 평균 가격은 모든 품목에서 미지정업소에 비해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표 6〉 착한가격업소 여부에 따른 평균 외식물가 비교(23년 12월 기준)

(단위: 원)



구분	냉면	비빔밥	김치찌개백반	삼겹살* (환산전)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
일반업소 평균 가격	9,870	9,482	8,124	13,728	6,490	15,810	8,181	3,046
지정업소 평균 가격	6,804	7,335	7,110	11,389	4,897	13,138	6,347	2,882
차이	3,066	2,147	1,014	2,339	1,594	2,672	1,834	165

주: (\*) 착한가격업소 삼겹살 가격은 g 기준 표준화 가격이 아니며, 100~250g 사이의 가격을 평균한 것임. 따라서 일반업소 평균 가격을 환산전(100~250g 가격) 가격으로 검토함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품목은 냉면(3,066원 저렴)이며, 가장 적은 차이를 나타내는 품목은 김밥(165원 저렴)으로 확인된다. 메뉴 가격 비교 결과 착한가격업소 메뉴가격이 일반업소 메뉴가격보다 19.06%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품목별로 비교한 결과, 대부분 착한가격 지정업소의 물가수준은 현 수준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최대 12년 전 수준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 체감 성과에 관한 정성분석

### 1) 설문개요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에 관한 체감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 지정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따른 매출액 상승, 고객 유입 증대 등 지원사업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다.

설문 대상은 착한가격 지정업소이며, 설문 기간은 2024.04.15.~2024.06.15., 약 2달간 진행하였다. 설문 방법은 모바일 설문 및 방문 설문을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2023년 기준 착한가격업소 등록 사업체 7,172개로 최소 표본은 착한가격업소 365개로 설정\*하였다.

설문 문항은 사업체 기초현황 관련 문항,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참여 경위 및 인지도 문항C.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참여 전후 변화 및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참여 전후 변화는 지원사업 참여 후, 매출액 증대, 고객 증가, 홍보 효과, 가게 이미지 개선 등에 있어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1,137개의 표본을 회수하였다. 먼저 지역별 분포를 검토하면 경기, 부산, 서울 지역의 응답률이 높았다. 앞서 시·도별 착한가격 업소 분포 확인 결과 서울, 부산, 경기 순으로 지정업소의 수가 많았으며, 분포가 높은 지역에서 응답율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응답자 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체 운영자 연령, 사업체 소재지·업종·운영 기간,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참여 연도, 최근 3개월 한 달 평균 매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사업

\* 모집단 크기가 7,172개라고 했을 때, 설문조사 결과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신뢰수준 95%, 허용 오차 5%에서 최소 표본 크기를 계산하였다. 표본 크기는 다음의 식을 통해 계산하였다. ( $N$ 은 모집단 크기,  $e$ 는 오차 한계,  $z$ 는  $z$ 점수)

$$\frac{\frac{z^2 p(1-p)}{e^2}}{1 + \frac{z^2 p(1-p)}{e^2 N}}$$

체 운영자 연령의 분포는 만 60세 이상(39.5%), 만50~59세(33.0%) 순으로 많았고, 사업체 소재지는 경기(14.2%), 부산(10.7%), 강원·충북(9.6%) 등 순으로 많았다. 사업체 업종의 경우 외식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 중에 한식이(54.6%)의 비중이 높았다. 사업체 운영 기간은 10년 이상이 56.6%, 5~10년 미만이 22.7% 순으로 많았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참여 연도 확인 결과 2023년(20.4%)과 2022년(13.6%) 참여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3개월의 한달 평균 매출은 400만원 미만(28.3%), 400~1,000만원 미만(27.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응답자 특성

(단위: 개, %)

구분		응답자 수	비율
전체		1,137	100
사업체 운영자 연령	만19~29세	19	1.7
	만30~39세	93	8.2
	만40~49세	201	17.7
	만50~59세	375	33.0
	만60세 이상	449	39.5
사업체 소재지	서울	104	9.1
	부산	122	10.7
	대구	99	8.7
	인천	37	3.3
	광주	45	4.0
	울산	6	0.5
	세종	12	1.1
	경기	162	14.2
	강원	109	9.6
	충북	109	9.6
	충남	84	7.4
	전북	22	1.9
	전남	73	6.4
	경북	42	3.7
	경남	86	7.6
	제주	25	2.2
사업체 업종	외식업(한식)	621	54.6
	외식업(일식)	23	2.0
	외식업(중식)	73	6.4
	외식업(양식)	24	2.1
	기타 요식업	96	8.4
	개인서비스업(세탁업)	33	2.9
	개인서비스업(이용업)	28	2.5
	개인서비스업(미용업)	160	14.1

구분		응답자 수	비율
	개인서비스업(목욕업)	7	0.6
	개인서비스업(숙박업)	16	1.4
	기타	56	4.9
사업체 운영 기간	1년 미만	17	1.5
	1~3년 미만	89	7.8
	3~5년 미만	129	11.3
	5~10년 미만	258	22.7
	10년 이상	644	56.6
사업체 최근 3개월의 한 달 평균 매출	400만원 미만	322	28.3
	400~1,000만원 미만	312	27.4
	1,000~2,000만원 미만	200	17.6
	2,000~3,000만원 미만	133	11.7
	3,000~4,000만원 미만	75	6.6
	4,000~5,000만원 미만	37	3.3
	5,000만원 이상	58	5.1

## 2) 분석결과

착한가격업소 선정 전후의 체감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업체 운영 전반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체감 효과를 살펴보았다.

착한가격업소 사업체 대한 체감효과 분석 결과 사업체 운영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이 지정사업체 점포 운영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04(44.3%)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가 166(14.6%)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의 유형을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미지 개선 및 향상(39.7%), 홍보 효과(21.9%),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요금 유지(19.8%)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표 8> 착한가격업소 지정으로 도움이 된 지원사업 <전체, 복수응답>

(단위: 개, %)

구분	매출액 증대	고객 증가	이미지 개선 및 향상	홍보효과	낮은 가격 유지	기타	총계
빈도수	71	152	533	295	266	27	1,344
비율	5.3	11.3	39.7	21.9	19.8	2.0	100.0

주: 해당 응답결과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사업체 운영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며 복수응답 처리하였음

다음으로 지원사업 유형별 체감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유형별 체감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종량제봉투,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물품지원(위생방역 용품 등 소모품)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지정표찰(착한가격업소 표지판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업소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업소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소모품이나 비용이 수반되는 물품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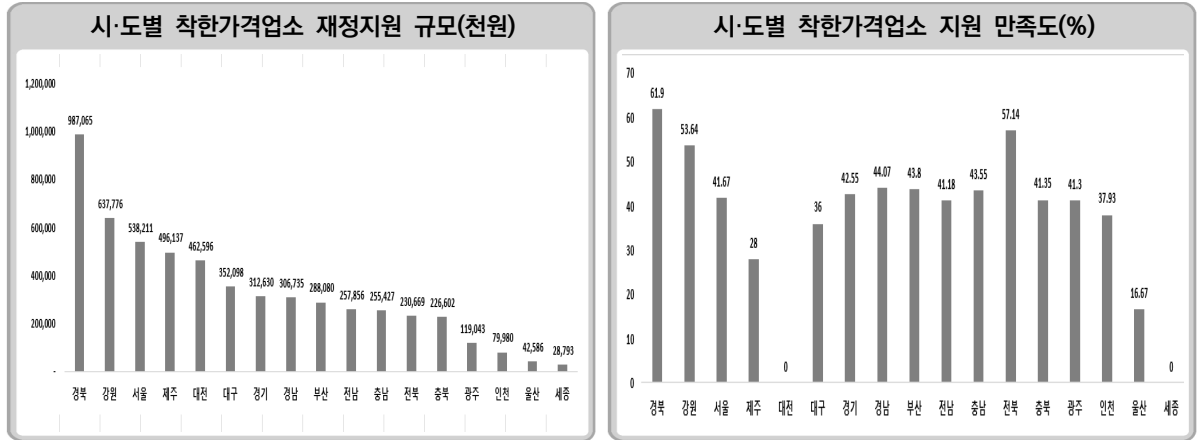
<표 9> 세부 지원사업별 체감효과

(단위: 개)

구분	도움이 됨	보통	도움이 되지 않음	해당 없음	미응답	총계
지정표찰	602	397	111	27	-	1,137
	52.9%	34.9%	9.8%	2.4%	-	100.0%
물품지원	880	189	26	42	-	1,137
	77.4%	16.6%	2.3%	3.7%	-	100.0%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요금 지원	897	169	23	48	-	1,137
	78.9%	14.9%	2.0%	4.2%	-	100.0%
안전점검 보조	485	258	77	317	-	1,137
	42.7%	22.7%	6.8%	27.9%	-	100.0%
자금지원 우선 추천	452	223	90	370	2	1,137
	39.8%	19.6%	7.9%	32.5%	0.2%	100.0%
경영환경 개선지원	493	213	86	342	3	1,137
	43.4%	18.7%	7.6%	30.1%	0.3%	100.0%
홍보지원	482	355	130	167	3	1,137
	42.4%	31.2%	11.4%	14.7%	0.3%	100.0%

마지막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에 따라 업소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2022년도 까지 중앙의 예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위한 재정규모 역시 지방자치단체 결정 사항이다. 따라서 지역별 차별적인 재정지원의 규모나 관리 수준에 따라 착한가격지정업소 지원 사업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토하였다.

〈그림 2〉 지역별 착한가격업소 재정지원 규모와 만족도



주: 재정지원 규모는 5년(2019~2023년) 평균 금액이며, 만족도는 2023년 기준임

검토 결과 지역별 사업 만족도는 재정지원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지원 규모가 유사한 경우 지원체계 및 관리 수준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경북이나 강원 지역의 경우 재정지원 규모가 큰 지역에 해당되는데, 경북 및 강원 지역의 착한가격 지정업소 응답자들은 지원사업 전반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재정지원이 미미한 울산의 경우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전북과 같이 재정지원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착한가격지정업소의 운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도 나타났다. 이 지역의 경우 재정지원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빠른 조례 제정을 통해 착한가격지정업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지원의 규모나 지원체계가 착한가격지정업소 운영 만족도에 차별적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은 향후 재정(운영)지원의 규모와 만족도의 관계를 통계적 검증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및 정책 제언

착한가격업소지원 제도는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 지원을 통한 지역물가안정화를 목표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이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체계적인 법·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제도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최근 고물가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중기부 등 많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지역물가 안정화 정책이 수행되었고, 행정안전부는 ‘지역물가안정’이라는 목표로 운영되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다. 즉, 2023년 최초 국비 15억원이 지원되었고, 2024년 18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업소당 평균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되었고 재정적 지원 규모가 소폭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긍정적 기대효과만으로 재정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의 효과성 검토를 통해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고, 제도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의 성과를 정량적·정성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정량적 측면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 성과를 검토한 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업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대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착한가격지정업소와 미지정업소를 비교한 결과, 2015-2020년의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 10.13%p, 10.03%p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품목별 물가를 비교한 결과, 착한가격업소는 지방물가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최대 12년 전 수준까지도 유지되는 품목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존하는 착한가격지정 업소의 수로 지역물가안정화에 관한 직접적인 효과 추정은 한계가 있으나 착한가격업소 대부분 지역물가 이하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간접적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착한가격업소의 양적 확대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화의 직접적인 효과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를 위한 지속적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착한가격업소지정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제도의 체감 효과를 검토하였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사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체감효과를 검토한 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운영 전반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으며,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가게 이미지 개선(39.7%)과 홍보 효과(21.9%)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요금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19.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격 인상으로 인한 지정 취소와 자진 취소 비율이 약 3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착한가격업소의 양적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착한가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는상권 내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사업체 보다 영업이익이 크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또한 최근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주변 상권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업소의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착한가격지정업소의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유지에 따른 여러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착한가격업소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지원사업 중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공공요금 지원이나 물품지원 사업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면 자진취소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지정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기흥. (2012). 한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법제의 발전-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16권 4호, 37-69.
- 관계부처합동. (2024.01.04.).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년 경제정책방향-”.
- 나채준. (2014).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정책세미나. 한국법제연구원.
- 박대근, & 김홍순. (2020). 이중차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의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서울시 수유 1 동과 수유 2 동의 비교. 국토지리학회지, 54(2), 151-163.
- 배순영. (2012). 착한가격업소가 진짜 착하려면. 소비자정책동향, (34), 1-19.
- 손호성, 이재훈. (2018). 행정학·정책학 연구에서의 이중차분 추정기법의 활용과 쟁점. 현대사회와 행정, 28(3), 1-31.
- 조용현, & 김호석. (2018).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성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2), 396-404.
- 조원희, 주혜린, & 전미선. (2021). 착한가격업소 인증제도 활성화의 영향요인 분석: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7(1), 77-94.
- 지방물가정보공개포털(<https://www.mois.go.kr>)
- 최유성·이현수. (199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행정안전부. (202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 행정안전부. (2024.03.).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 홍기용. (1996). 「지역경제론」, 박영사.
- 황관석, & 박철성. (2015).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수도권 DTI 규제효과 분석. 주택연구, 23(4), 157-180.

## Performance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Support System of Good Price Stores

Boram You & Seohye Lee

The Support System for Good Price Stores is a policy introduced in 2011 to stabilize regional prices. Although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its implementation, the system remains relatively unknown, and systematic support has not been adequately provided. However, with the recent acceleration of high inflation, the importance of this support system has come into focus.

In 2023, for the first tim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was allocated to expand assistance for Good Price Stores.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expect continued financial support without evidence of the policy's positive outcom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support system to ensure its validity.

This study evaluates the program's outcomes from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erspectives, revealing three significant findings. First, Good Price Stores contribute to reducing local price levels. Second, their sales and operating profits show measurable growth. Third, a qualitative assessment indicates that the program positively influences store image and promotional effectiveness.

**Keywords:** Good Price Stores, Price Stabilization Policies,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

**유보람** :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재정, 정부간관계, 지역 발전,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재정 투명성과 정부 간 자원배분: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분을 중심으로(2024), 주택분 재산세의 가격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 개 자치구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2020) 등이 있다. (boram3884@krila.re.kr)

**李徐姬** :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재정, 지방세, 지역 경제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 머신러닝 방법론을 적용한 지방세수 예측 방안 연구(2024), 재정분권정책 관련 학계와 언론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2024) 등이 있다. (seotae10@krila.re.kr)

원고접수일: 2024.11.22, 원고수정일: 2024.12.01, 게재확정일: 2024.12.05.